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민주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맞춰 비대면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전북형 뉴딜위원회'를 구성(디지털뉴딜분과, 그린뉴딜분과, 사회적뉴딜분과),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그 결과 오늘 오후 2시 30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각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 전북형 뉴딜 비전제시 등 뉴딜을 통한 전북도의 새로운 밑그림을 모색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종합토론회는 전북 K-뉴딜 공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안주·진안·무주·장수)이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기조발제를 한다.

또한,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

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과 전북형 뉴딜 허브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의 기조발제를 하며 시작한다.

이어 각 분과별(디지털뉴딜분과, 그린뉴딜분과, 사회적뉴딜분과) 정책 및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그 결과 오늘 오후 2시 30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각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 전북형 뉴딜 비전제시 등 뉴딜을 통한 전북도의 새로운 밑그림을 모색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종합토론회는 전북 K-뉴딜 공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안주·진안·무주·장수)이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기조발제를 통해 "진화한 K-뉴딜의 조건과 환경 속에

서 전북형 K-뉴딜의 경로와 대안을 치열하게 다듬어 왔고, K-뉴딜 성공을 위해 상상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전북도당과 전북도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는 종합토론회 이후 주요 대학 총장 및 공공기관장 간담회 등 전북형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및 정책 제안과 전북형 K-뉴딜 허브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맞춰 발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북도당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pdnpb>) 및 전북도당 유튜브 공식 채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https://www.youtube.com/channel/UCyq_67tyXlWuVx1lvqd1kuw)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유호상 기자

한농연 선정 '국감 우수의원' 수상받아

민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인정받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농연은 이번 국정감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이원택 의원이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촉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상품성 개선 촉구 등을 주요 공적으로 이번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실패 문제점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농지감소 대책 ▲김치무역적자 ▲농업용수 수질 문제점 ▲종자산업 문제점 ▲밀 산업 정책 문제점 등을 집중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장을 반영한 정책국감을 충실히 이행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中 왕이 외교부장과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정무, 진형석·정책, 김이재... 도의회 민주 원내수석부대표단 구성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경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무수석부대표에 진형석 의원, 정책수석부대표에 김이재 의원을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진 부대표는 당정 협의 및 전북도와 교육청 등 정부직 현안을 처리하며, 김이재 부대표는 정책협의 등을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김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선임하면서 당초 정무수석부대표인 진형석 의원의 역할을 구분해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한 것이다.

성경찬 원내대표는 "원만한 원내 운영을 위해 선배 동료의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예산안 포함해야" ... 남원시의회 행감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정책이 3년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국비지원이 사라지는 정책변화에 맞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평기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상황을 문제삼으며, "쌀 생산량이 넘쳐 타작물 전환 지원을 중단하면 정책이 협조한 주민들은? 주민지원의 공백과 농가소득감소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남원시 특화 산업인 옷칠 목공예 대전의 국비지원 중단에 대해 남원시 대책을 추궁하고, 남원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을 공공비축미 품종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돼야"

이해양 무주군의원, 행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보다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월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서는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으로 한경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금이 없었다. 이를 지자체가 보듬어 안고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지급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다자녀가구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국가에서 4인 가구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채워주지 못한데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3~5명의 다자녀인구가 250명도 안 돼 예산부담도 적다며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조금만 노력하면 완벽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양 의원은 "국가정책이 대동맥이라면 지자체의 정책은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실타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돌아보고 다자녀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행정복지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재난지원금이 갑자기 결정되고 추진되다보니 살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의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동의하고 준비라도 물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가 250명도 안 돼 예산부담도 적다며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조금만 노력하면 완벽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양 의원은 "국가정책이 대동맥이라면 지자체의 정책은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실타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돌아보고 다자녀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행정복지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재난지원금이 갑자기 결정되고 추진되다보니 살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의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동의하고 준비라도 물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1년간 청년 한명당 360만원 지원 효과 있을까?"

농산경위, 일자리경제본부 예산 심사에서 청년 정착 지원 관련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6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7억 1,994만원보다 942억 4,375만원이 증가한 1,579억 6,370만원 규모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 3,406만원보다 986억 6,284만원이 증액된 2,922억 9,69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농산경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호은 의원(전주1)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추진에 있어 1년간 청년 한명당 360만원정도 지원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개발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북우

상상품라인박람회(JB-FAIR) 관련 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온라인상 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을 질타하며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종류가 너무 많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 가치수를 줄여 집중적 예산 투입을 통해 확실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 프로그램 다양성 늘려야"

교육위, 도내 12개 직속기관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6일 도내 12개 직속기관의 2021년도 예산을 심사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가 코로나19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학생해양수련원'의 해양체험 교실 예산이 수요자 부담으로 일부 전환해 감소한 것에 대해 "학교의 부담이 아닌 학생 부담으로 전가 돼선 안된다"며 "운영 방식 변화에 따른 혼란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자를 명확하

게 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전북혁신교육 중단 연구에 대해 "지난 행감에서도 중단 연구 진행 부실을 지적했다"면서 "관련 예산규모를 줄이고 연구 대상을 이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중단연구의 사유와 맞지 않다"며 보여주시기 예산 절감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수 의원(군산2)은 'ICT융합기기' 확충 예산에 대해 "고가의 장비 구입이면서 구매 후에도 보관과 관리에 추가비용이 든다"며 "기기 구매 이전에 대여 횟수와 만족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직속기관

이 운영하는 독서교실들이 지역 서점을 이용해 지역경제와 주민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가 좋지만, 편성된 예산이 다른 사업 대비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향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전주6)위원장은 "도서관 비품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성이 높은지 여부를 따져 도서관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활용성 높은 비품 배치는 도서관 이용률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수요가 반영된 시설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기본계획 줄속추진 안될말" "소파보수 등도 도로대장과 연계를"

한복위, 새만금해수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6일 새만금해수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사업"과 관련해 "현재 전북도 해역에서 혼획되고 있는 포유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혼획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관련 데이터 또한 도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기본계획(MP)의 변경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새만금개발의 로드맵인 MP가 줄속추진이 되지 않도록 전북도가 철저히 챙길 것"을 요청했다.

진형석 의원은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타 지역 항구에서 전북 지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면 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위,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도로에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가 도로대장에 포함돼 있어 이를 전산화해 관리하면,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트홀과 소파보수 등 유지보수사업 현황도 도로대장과 연계해 시스템화해서 지방도를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한옥 건축지원 사업에 대해 도 조례상 신축 한옥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시·군 조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뚜렷한 매뉴얼로 도민들이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2020년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 365억원이 아꼈는데, 2021년 편성 예산까지 총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해서라도 반복되는 명시 이월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부동산경제 양극화 원인 규명해야"

두세훈 도의원 "구도심 활성화 위한 지역균형예산 확대 편성"

최근 도내 예코 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역별 부동산과 지역 경제력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도의회 예 산심사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두세훈(완주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2021년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심사에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전주 예코시티 신축 아파트(전용 117.9㎡)가 지난 11월 초 11억 원에 거

래때 불과 5개월 만에 4억 원이나 올랐다"면서 신규아파트 가격의 기형적 상승을 우려했다.

두 의원은 "일부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급등 현상은 다수의 법인매물을 고려하면 투기세력의 개입 의혹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각종 대규모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이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두 의원은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총사업비 200억), 가족친화공간 조성(총사업비 90억), 대표도서관 건립(총사업비 492억) 등 대규모 사업이 신도심에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구도심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

시재생 등 지역균형예산 확대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도 부산시처럼 '지역불균형실태분석' 지표를 만들어 부동산경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찾고, 지역균형개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전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아파트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특단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